

野黨 불참한 정보위 “참전 북한군 1100여명 사상” 정보공유

정보위, 러-우크리戰 北 현황

쿠르스크 배치 북한군 1.1만명 추정 이달부터 실전 투입, 장성급도 사망

“북한, 대남 무관심 모양새 견지 한국 정치상황 등 언급하지 않아”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정보위원들은 불참했다.

국정원은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예상되는 종전 협상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의 막바지 영토 탈환 공세로 최대 격전지가



조태용(왼쪽 두 번째)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성범(가운데) 정보위원장과 권성동(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쿠르스크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인해 장성급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전사한 최고위 계급은 적어도 장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두고는

“아직 규모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대신 북한의 파병 징후들이 보이고 파병 여력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판단된다). 폭풍 군단은 10개 여단 4만 2000명의 군사력을 가졌고, 현재 1만 1000명이 파병됐다”고 답했다.

북한군 내에 동요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내부 주민과 군인 내에서 동요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군인들의 경우 본인들이 추가 파병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현재 한국의 계엄선포

사태 등 상황을 사실관계 위주로만 보도하고, NLL MDL 등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 기초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남 무관심 모양새를 견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언급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적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게 되면 체제 관리 부

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기초의 보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 이유를 두고는 “야당 간사께서 계엄 사태로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당한 사람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참여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며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하에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계엄 문제로 안보, 외교, 경제에 최대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조태용 국정원장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와는 별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에는 “국정원이 짧게 자료 제출만 했고, 정치적 사안을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m

>> 1면 ‘한덕수, 양곡법 등…’서 계속

비대위원장 후보에 ‘친윤계’ 거론… 내주 인선 가능할까

국민의힘, 선수별 후보 추천받아 권성동 겸직·투톱 체제 등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위한 선수(選數)별 모임을 시작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초선과 재선, 3선 등 선수별로 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은 선수별로 2명씩 추천을 요청했다고 한다.

권 권한대행은 선수별로 의견을 받고 내주 초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어, 논의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이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국민의힘 재선의원들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선수별 모임을 통해 비대위원 후보군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영진·김승수·박수영·엄태영·이인선·조정훈·정희용·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급하게 모임이 잡힌 탓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태영 의원은 재선의원 모임 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들이 8명밖에 안 오셔서 개별적으로 다시 의견을 모아 내일(20일) 오전 중에 원내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재선의원들은 비대위의 성격과 체제에 대해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엄 의원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서도 권성동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하는 안과 조기 대선을 감안해 ‘투톱’ 체제가 필요하다는 안이 모두 거론됐다. 그러면서 “(재선 의원들은) 원톱으로 갈지, 투톱으로 갈지는 반반”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번 비대위가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관리형’이 될지, 전반적인 당 체질 개선을 도모하는 ‘혁신형’이 될지를 먼저 정해야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엄 의원은 “일단 비대위의 성격을 정해야 (내부 인사인지 외부 인사인지) 거기에 맞는 인물도 추려질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 의원은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 “정치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해 지식과 통합의 의미가 있는 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초선 의원들도 같은날 오후 선수별 모임에 나섰다. 초선 모임 간사인 김대식 의원 측은 오후 4시30분 초선 의원 회동을 공지했다. 초선과 재선은 의원수가 많다는 점에서 의견 수렴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 등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날(18일) 의원총회에서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친윤·중진들이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민심과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비대위원장은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민심을 돌려세우면서도, 흑시라도 있을 조기대선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상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가깝거나 그동안 대통령의 독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왔던 사람들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주 초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까지 의견 제출이 다 들어오면 주말에 고민해 다음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양곡법 개정안 시행엔 쌀값 하락 심화시킬 것”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중언감정법에 대해서는 “중요한 안전심사와 청문회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이다. /서예진 기자

美 “기준금리 인하 속도조절… 물가 2%로 낮출 것”

>> 1면 ‘美, 매파적 금리인하…’서 계속

미 연준은 이날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4.5%로 0.25%p 낮췄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5.25~5.5%에서 4.75~5%로 0.5%p 인하한 뒤 11월 0.25%p, 12월까지 총 1.0%p를 인하했다. 한국(3.0%)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50%p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안정과

고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박빙의 결정(closer call)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 파월, 트럼프와 충돌 예고

이날 FOMC 의원들은 향후 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를 통해 내년 2회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지난 9월 4회 인하할 것 이란 전망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FOMC 의원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일부 FOMC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을 전망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면서 “새로운 정책의 정확한 영향 평가는 가능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모든 국가수입품에 전면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미국 내 수입품은 관세비용이 전가돼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 무작

정 금리를 인하하기보다 물가흐름을 보고 금리인하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3.1%에서 11월 2.7%대로 떨어진 상태지만 목표치 2%보다 높은 수준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이 정도의 물가수준을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준금리 인하속도를 조절해서라도 2%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FOMC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금리조정 폭(Extend)과 시기(Timing)라는 표현을 사용해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유리 기자 yul115@